

<인사이트코리아 – 기업시민포럼>

2030 ESG 핵심 Keyword

2023. 06. 20 / 김·장 법률사무소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K&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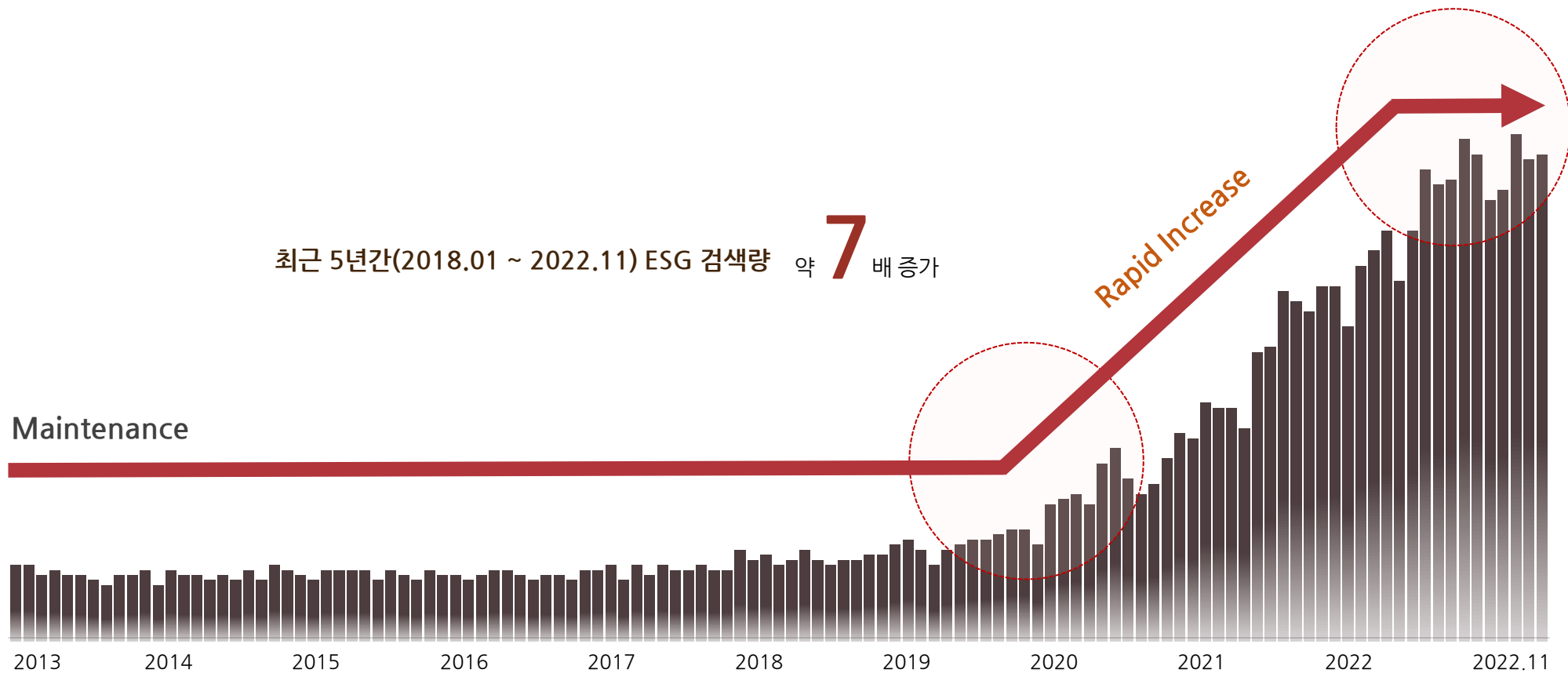
Copyright © Kim & Chang 2023

ESG Trend Watch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 → 2018년 이후 점진적 증가, 2019년 트렌드 특이성 형성(Singularity), 2023년 완만하게 증가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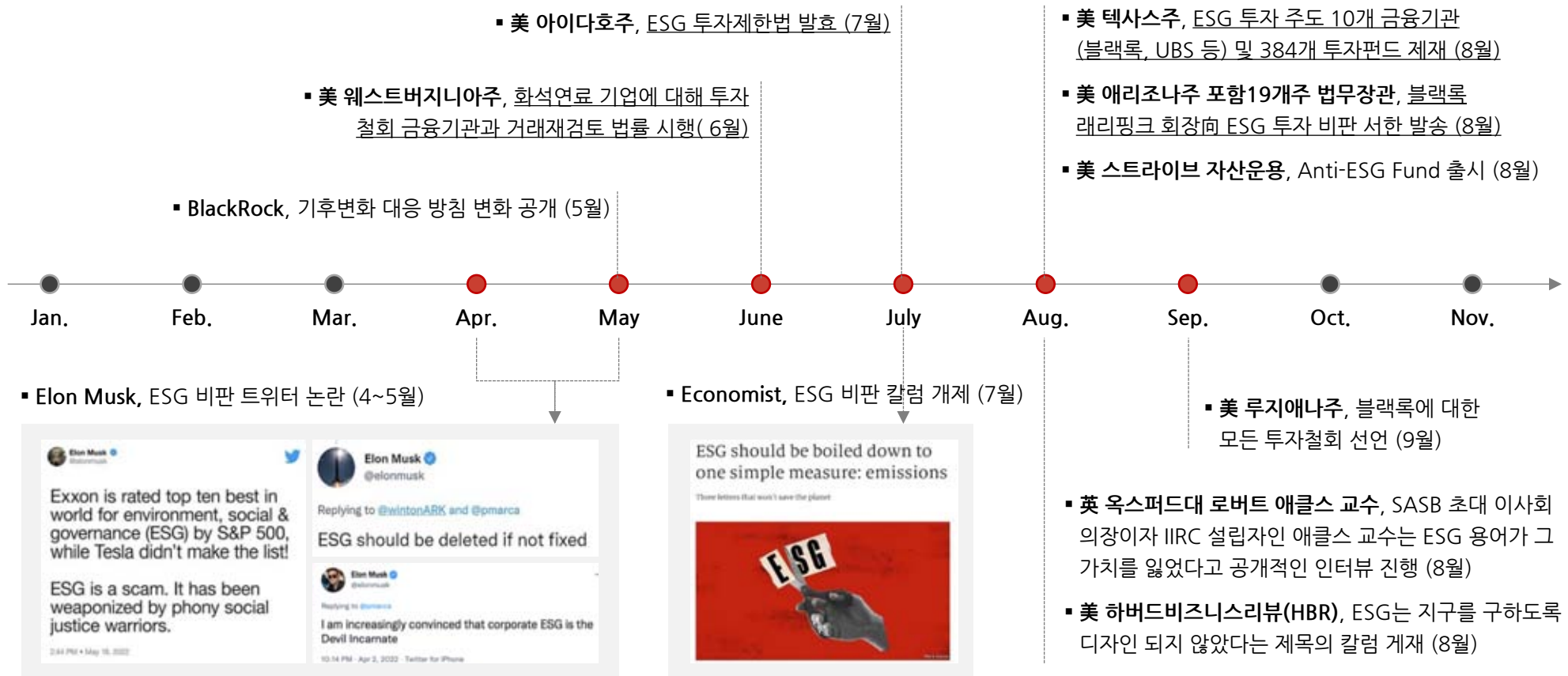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되던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5년(2018년~2022년) 사이 급격히 증가

Source : Google Trends Research (2022년 1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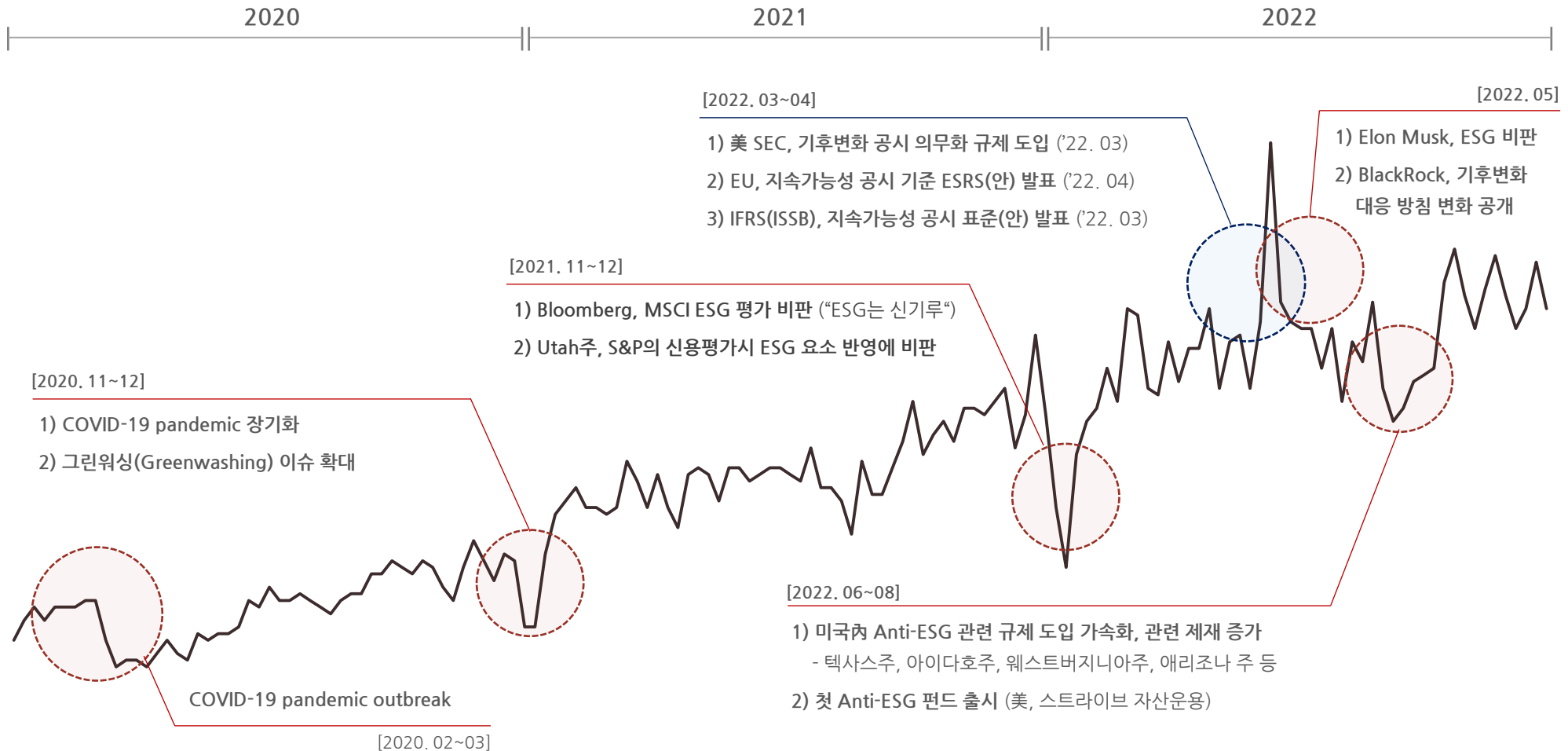
최근 ESG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Anti-ESG Voice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ESG 투자를 진행하는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도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주의 깊은 관찰 必

Anti-ESG 관련 글로벌 주요 규제 도입 및 이슈 동향 (2022)



ESG Trends for 3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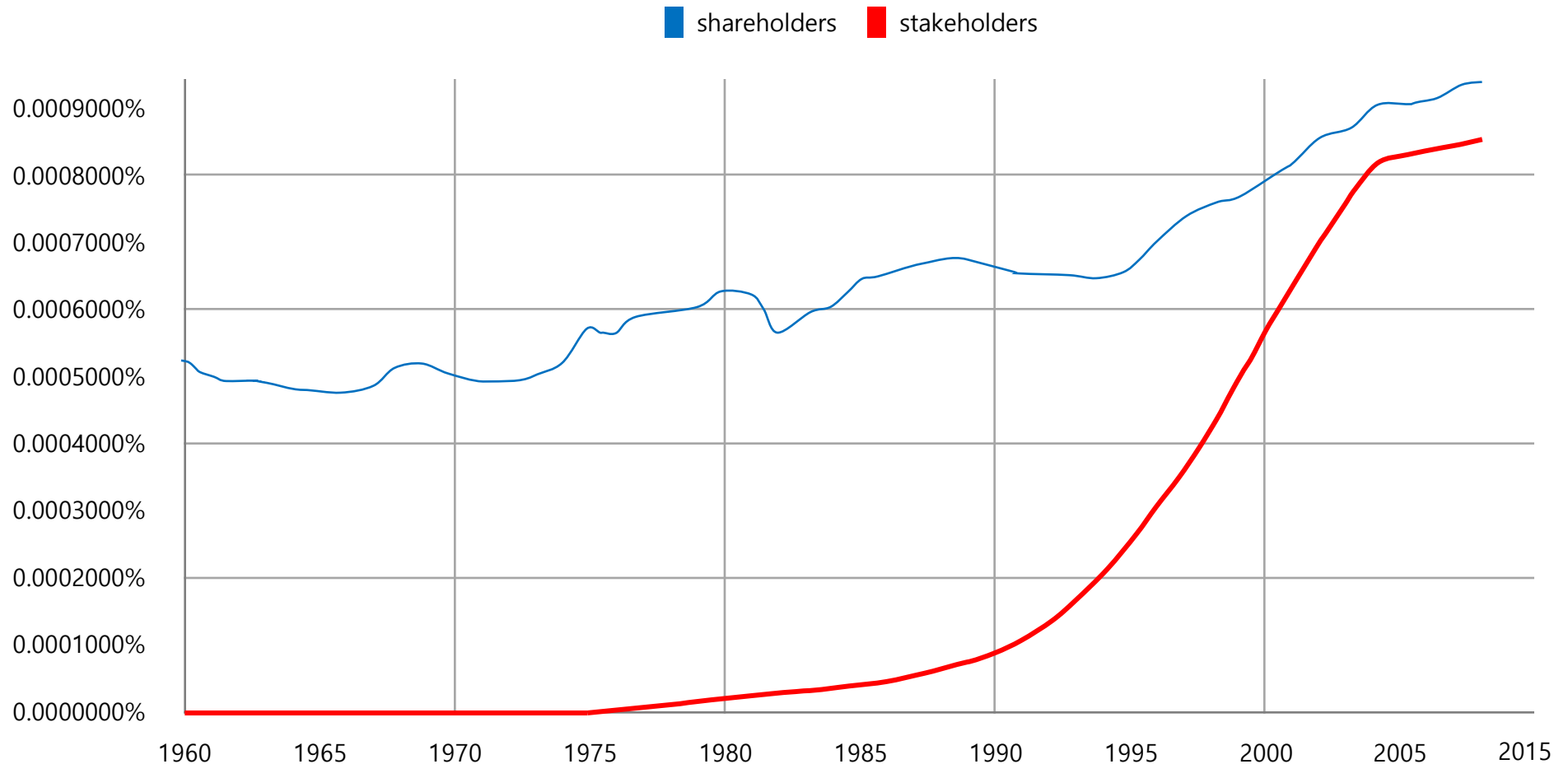
Covid-19, 경기침체, Anti-ESG Regulation, ESG 평가결과 논란 등 다양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ESG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Source : Google Trends Research (2022년 11월말 기준)

Shareholder vs. Stakeholder Value

주주가치(이윤) 극대화와 이해관계자 가치 극대화는 상반된 개념이 아님. 더 이상 이윤 극대화의 개념과 이해관계자 가치 극대화의 개념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음



* Source: Professors Robert Eccles and Gerge Serafeim

Agenda #1. ESG Regulations (ESG 법제화)

투자자들은 국가의 ESG 관련 규제 프레임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Top 3 요소로 1) 글로벌 표준, 지표 등의 통합, 2) 투자자 ESG 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3) ESG 리스크의 공시 지침 제공을 제시

ESG 규제 우선 고려 분야

Priorities Agenda	2021	2022
1 글로벌 ESG 표준, 지표, Taxonomy 등의 조화	45%	45%
2 투자자를 위한 ESG 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38%	44%
3 ESG 리스크의 정량적 공개 지침 제공(일관성/객관성 확보)	43%	42%
4 기업의 재무 보고와 ESG 보고의 통합 장려	32%	32%
5 그린워싱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시행	Data not available	28%
6 로컬 ESG 인증 제도 개선	Data not available	26%
7 잦은 규제의 변경, 도입 지양	25%	24%
8 규제의 Focus Area 변경 (로컬 → 글로벌)	17%	22%
9 Policymakers간의 화합/융합	14%	20%
10 최신 규제에 대한 추가 지침 발행	16%	17%

Agenda #2. ESG 정보공시 의무화

한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5년 거래소 의무 공시를 넘어 '27년 법정 공시로의 전환 등 ESG 정보공시 규제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 ESG 정보공시 의무화(안)

상장시장	자산규모	'25	'26	'27	'28	'29	'30	'31	'32
KOSPI	2조원 이상	거래소 공시		법정 공시					
	1조원 이상	자율 공시		거래소 공시		법정 공시			
	5천억원 이상	자율 공시				거래소 공시		법정 공시	
	5천억원 미만	자율 공시					거래소 공시		법정 공시
KOSDAQ	5천억원 이상	자율 공시				거래소 공시		법정 공시	
	5천억원 미만	자율 공시							

Source :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자본시장연구원, '23. 05)

- ❖ '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KOSPI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 시행 (자율공시 → 거래소 공시 → 법정 공시)
- IFRS(ISSB) 공시 표준 기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마련 예정
-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화 (법정 공시 적용 3년차부터 공시 의무 적용)

글로벌 주요 ESG 정보공시 규제 및 표준

규제 / 표준	주요 내용
EU CSRD	• 일정 규모 이상의 EU 상장, 비상장 기업 대상('25년~, 단계적 적용) • EU 역내 순매출, 종업원, EU내 자회사 상장여부 등의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非EU 기업도 '29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됨
EU CSDD	• 임직원, 매출액 등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EU 및 非EU기업 대상 • 적용대상은 공급망 인권, 환경 실사 수행이 필요하며, 국내기업의 EU내 해외법인, EU 수출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非EU 기업에도 영향 예상됨
US SEC	• 美 상장사 대상, 시총 기준 '24년부터 단계적 GHG 배출량 공시 의무화 • 배출량 3자 검증 의무화 (제한적 검증 → 합리적 검증으로 단계적 확대) •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화 ('25년~, 단계적 적용)
IFRS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 ESG 정보공시 국제 표준 개발 • '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 발표 예정 • 연결기준 재무정보 공시 범위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요구

- ❖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ESG 규율 강화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업장 + 공급망 ESG 요소 리스크 관리 必)
- 주요 해외 법인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적용 여부 검토 및 대응 필요
- 연결기준 범위의 ESG 정보 공시 요구 대응 필요 (CSRD, SEC, IFRS 등)

CASE. Consolidated Data

글로벌 ESG 공시 표준 및 규제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경영보고서內 보고 범위 확대를 위해 연결기준 종속회사, 나아가 관계회사, 손자회사를 포함하여 ESG 데이터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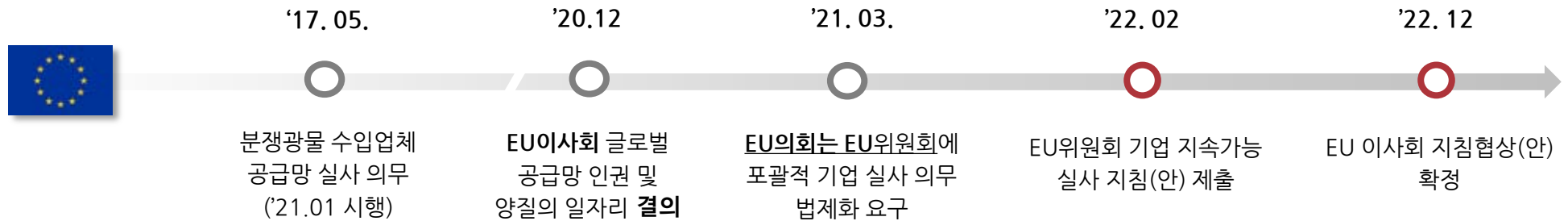
국내외 기업	ESG 보고 확대 범위	세부 내용
	연결기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 지속가능보고서 內 데이터 보고 범위에 연결기준 전체 회사 (Fully consolidated companies) 포함 공시 * Source: SIEMENS SUSTAINABILITY REPORT 2022 (129p)
	연결기준 종속회사	❖ ESG DATABOOK 內 보고 범위에 미쓰비시중공업과 함께 연결기준 종속회사(Consolidated subsidiaries) 포함 공시 * Source: ESG DATABOOK 2022 (2p)
	연결기준 종속회사	❖ ESG 보고 범위에 연결 종속회사 포함 및 종속회사명 리스트 공시 ❖ 종속회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데이터 커버리지 비율 100% 충족 공시 * Source: SOMPO Holdings Sustainability Report 2021 (90p)
	연결기준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의 손자회사	❖ ESG 보고 범위에 연결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의 손자회사 포함 공시 ❖ 연결 종속회사 및 손자회사별 ESG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공시

Source: <https://www.skecoplant.com/contents/contents?menuCode=M3702>

Agenda #3.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22년 12월 EU이사회가 지속가능성 실사법 협상(안)을 확정함에 따라 EU의회와 EU이사회는 ‘23년 5월까지 협상안에 대한 합의 예정 → 적용기업 + 자회사 + 협력업체 대상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예방, 완화 및 해소 목적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



1. 기업의 의무

- 적용 대상 기업의 **자회사** 및 가치사슬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력업체, 파트너**들에 대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사 체계 구축 및 실행

2. 이사의 의무

- **인권,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영 의사결정**을 하며, **사업모델 및 전략**이 **파리기후협약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 **실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 감시**

3. 위반시 제재

- 지침 위반 관련 EU 회원국별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는 **제재 수단 마련** 필요
- 기업의 실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有

❖ 실사는 지침 적용 기업과 적용 기업의 자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협력업체)에 대하여 진행, 실사 대상 기업에 대하여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지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실사 정책 및 실사 추진 체계 수립 필요

Agenda #4. 탄소중립 & 탄소국경조정제 (CBAM)

현재 진행 중인 Trialogue 협상 결과에 따라 역외 기업에 대한 탄소세 부과 시점 및 수준 상이 → 1차 포함 대상 제품군의 탄소 LCA 평가를 통한 내재 배출량 관리 및 대상 산업 확대 전망에 따른 사전 준비 必

EU CBAM 입법 추진 경과



- ❖ 러-우 전쟁 등 여러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EU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 강화되는 추세로 정책 도입 시점은 조정되더라도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보임
- ❖ 추가 4개 품목의 배출량 산정의 기술적 타당성은 기확보되어 추가 가능성 有 → 대상 품목의 LCA 평가 및 제품 배출량 관리 필요

CASE. BMW & Suppliers



[한국경제] 유럽發 'RE100의 공습'...녹색 보호주의에 궁지 몰린 韓 부품사

이지훈 기자 (2023.05.15) 지면 B5

- 선진국發 녹색 보호주의 본격화 BMW 등 車업체 'RE100' 요구
- 국내 부품사와 계약 취소 잇달아, RE100 이행 못하면 탄소세 부담

[내일신문] 애플 BMW 소니 등 전세계 250여개사 참여 주류 금융 소비재 IT 등 업종 다양

LG화학 SK하이닉스도 동참 추진, 2020-09-14



Agenda #5. 신용평가사 ESG Rating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에 ESG 리스크 반영 모델 개발('17년 ~ '19년), 사업화 및 서비스 모델의 확장 추진('20 ~ '22년) → ESG 리스크 반영 모델 기반 기업 신용등급 분석에 ESG 요소 직접 반영 본격화('22년~)

S&P Global

S&P Global

4,200개 기업 신용등급 분석에 ESG
요소 직접 반영('21.10)

('21. 10) 4,200개 기업 신용등급 분석에 ESG
요소를 직접 반영, 기업 보고서 발간

('21. 04) S&P Global Sustainable 1 신설

('20. 01) RobecoSAM ESG ratings biz 인수

('19. 11) Forward-Looking ESG
Benchmark 출시

('17. 01) Incorporate ESG Risk Analysis
도입

Moody's

MOODY'S

신용등급 분석 대상 5,700개
기업에 ESG 등급 부여('22.11)

('22. 11) 신용등급 분석 대상 5,700개 기업에
ESG 등급 부여

('22. 09) ESG Balanced Scorecard 개발

('22. 07) ESG Insurance Underwriting
Solution 개발

('22. 04) ESG 360 플랫폼 출시

('21. 08) Global Compact Screening Tool 출시

('21. 07) ESG Score 예측 서비스(Predictor) 출시

('20. 09) Moody's ESG Solutions 신설

Fitch Ratings

FitchRatings

10,500개 기업 및 금융상품에 ESG
등급 부여('22.02)

('23. 03) Climate Vulnerability Score 제안

('22. 11) Covered Bonds ESG Ratings 출시

('22. 09) ESG Ratings, Data & Analysis 출시

('22. 02) 10,500개 기업 및 금융상품에 ESG
등급 부여

('21. 09) Sustainable Fitch 출시

('19. 01) ESG Relevance Score 프레임 발표

Agenda #6. Green Washing

최근 ESG를 통한 기업 활동의 투명성, 진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제품/서비스와 금융/투자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재와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음

01

USA

BNY Mellon ('22. 07)

美SEC는 BNY멜론 투자부문에 ESG 정보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150만 불(한화 19억 원) 벌금 부과.(지난 3년간 185건 투자 중 67건 ESG 품질 적격 기준 미달)

02

UK

HSBC Holdings ('22. 10)

영국의 광고표준위원회(ASA)는 HSBC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버스정류장 광고에 녹색 자격(Green Credentials) 관련 소비자 오해 유발을 사유로 광고 금지 명령을 조치 함

03

Germany

DWS Group ('22. 09)

독일 자산운용사 DWS 그룹은 녹색 라벨 펀드에 대한 허위 표기 및 투자자 현혹을 사유로 '22년 9월 독일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되었으며, '23년 3월 심리 예정

04

Brazil

Vale S.A. ('22. 04)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 업체인 Vale은 '19년 1월 댐 붕괴로 270명 사망 사건 발생 전 안전 관련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 제공을 이유로 美SEC로부터 기소

05

France

TotalEnergies ('22. 03)

ClientEarth, Greenpeace 등 프랑스내 비영리 단체들은 TotalEnergies가 공시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에 대해 과장 광고 및 홍보를 이유로 '22년 3월 법적 소송 제기

06

Korea

SK엔무브 ('22. 10)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사유로 공정위에 신고, 소비자시민모임도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임시중지 명령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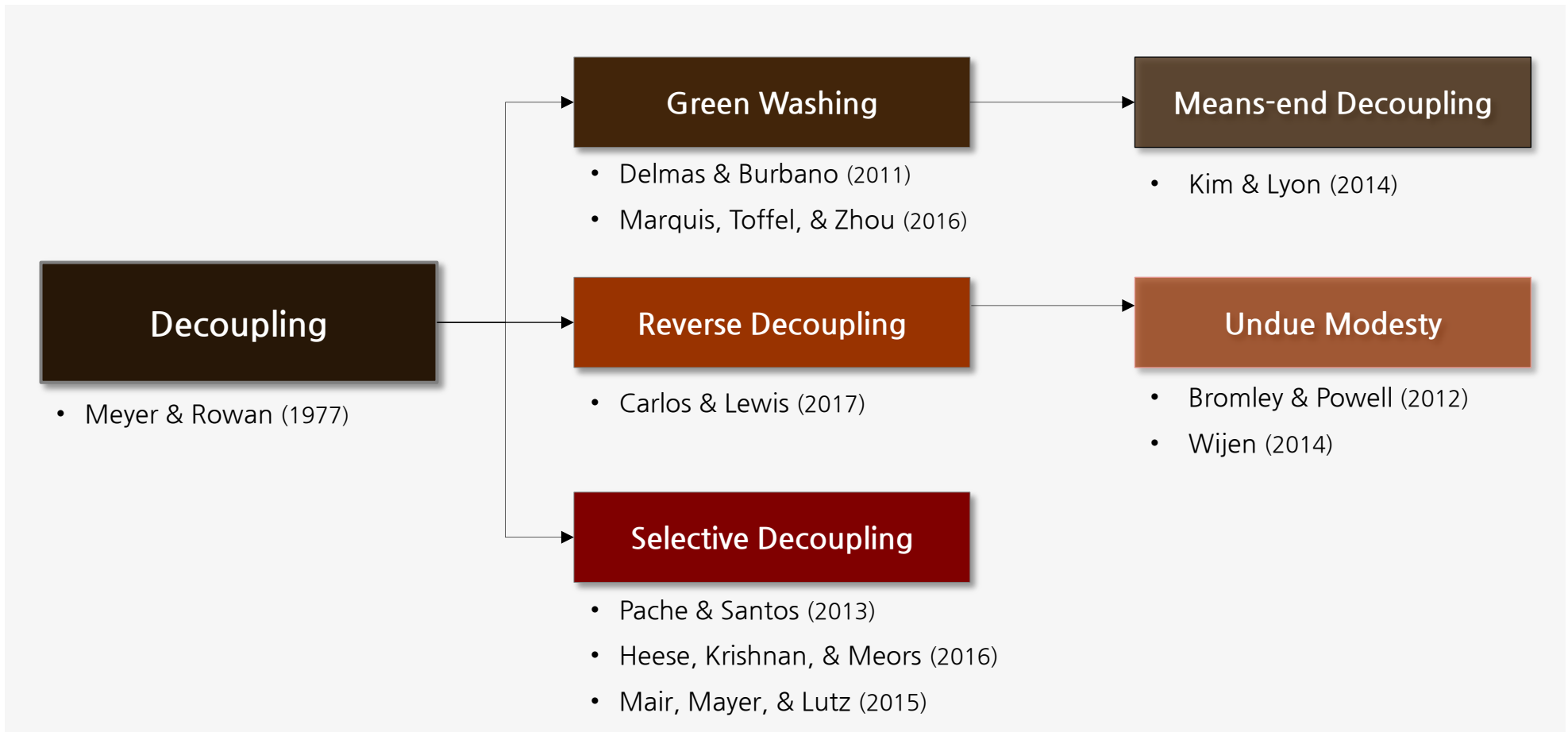
CASE. Green Washing 관련 사례

No.	Company	Country	Year	Contents		Status
1	Goldman Sachs	USA	'22. 11	'22년 11월 美 SEC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을 ESG 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ESG 투자와 관련된 정책과 절차 위반 혐의로 기소, 한화 약 54억원 벌금 부과	정부 (투자자)	과징금
2	H&M	USA	'22. 11	'22년 11월 H&M은 지속가능 제품 컬렉션이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 소비자들에 의해 美연방법원에 소송 제기됨	소비자 (소비자)	소송 중
3	HSBC Holdings	UK	'22. 10	'22년 10월 영국 광고표준위원회는 HSBC의 기후변화 대응 버스정류장 광고에 녹색 자격(Green Credentials) 관련 소비자 오해 유발을 이유로 광고 금지 명령	정부 (소비자)	광고금지
4	DWS Group	Germany	'22. 09	'22년 9월 독일 자산운용사 DWS 그룹은 녹색 라벨 펀드에 대한 허위 표기 및 투자자 현혹을 사유로 독일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되었으며, '23년 3월 심리 예정	시민사회 (소비자)	소송 중
5	Asos 외 3개사	UK	'22. 07	'22년 7월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 Asos, Boohoo, Asda 3곳의 친환경 마케팅에 대해 허위 광고를 이유로 그린워싱 여부 조사중	정부 (소비자)	조사 중
6	BNY Mellon	USA	'22. 05	'22년 5월 美 SEC는 ESG 투자정보 허위 기재 및 누락으로 투자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BNY멜론 투자운용사에 한화 약 19억원의 벌금 부과	정부 (투자자)	과징금
7	ExxonMobil	USA	'22. 04	'22년 4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엑슨모빌의 재활용 플라스틱의 폐기물 문제 완화 효과 캠페인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했는지 소환 조사	정부 (소비자)	조사완료
8	Vale S.A.	Brazil	'22. 04	'22년 4월 세계 최대 철광석 업체 Vale는 '19년 1월 댐 붕괴로 270명 사망 사건 발생 전 안전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허위 제공을 이유로 美SEC로부터 기소	정부 (투자자)	소송 중
9	TotalEnergies	France	'22. 03	'22년 3월 Greenpeace 등 프랑스내 비영리 단체들은 TotalEnergies가 공시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에 대해 과장 광고를 이유로 소송 제기	시민사회 (소비자)	소송 중

Ref. Saying - Doing vs. Saying - Saying

대부분의 제도적 디커플링은 Green Washing 보다, Means-end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최근에는 ESG 공시 규제와 함께 Saying-Doing Difference 뿐만 아니라 Saying-Saying Difference 에 대한 주의 必

40 Years of Trajectory



Agenda #7. Initiative for Social Issues (UN PRI - Advance)

‘22년 12월 2일, UN PRI는 투자자들의 사회(S) 영역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220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발족, 40개 기업명단 발표,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Institutional Investors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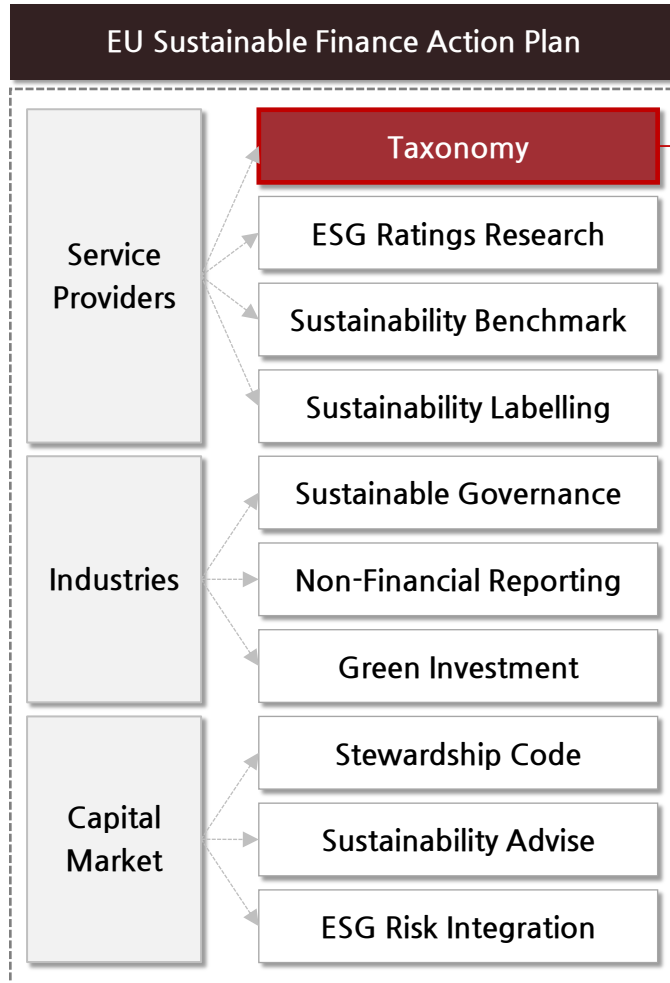
Advance :: A Stewardship Initiative for Human Rights and Social Issues



Ref. Social Taxonomy

EU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필요성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Social Taxonomy 최종안('22. 3. 28.), 입법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

* EU 택소노미,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등을 준수하여 입법화 추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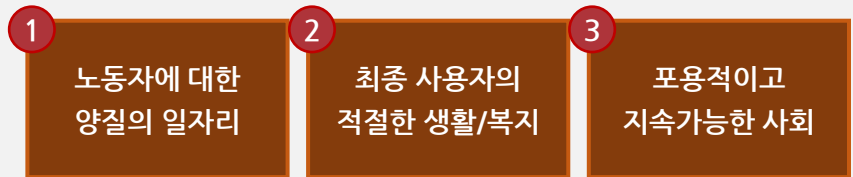


Social Taxonomy ('22. 2. 28.)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분류 체계



EU Taxonomy ('20. 6. 18.)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분류 체계

❖ 3 Objectives and Key Topics for a Social Taxonomy



Key Topic	Stakeholder group
노동권, 근로조건	Workers
사회보호 및 포용성	Workers, communities and societies
차별(Discrimination)	Workers, communities and societies
건강, 주거, 교육, 음식	End-users, communities and societies
실업, 자영업, 고령화	Workers
소비자 보호, 정보보호	End-Users
포용적 사회	Societies, Communities
부패, 탈세	Socie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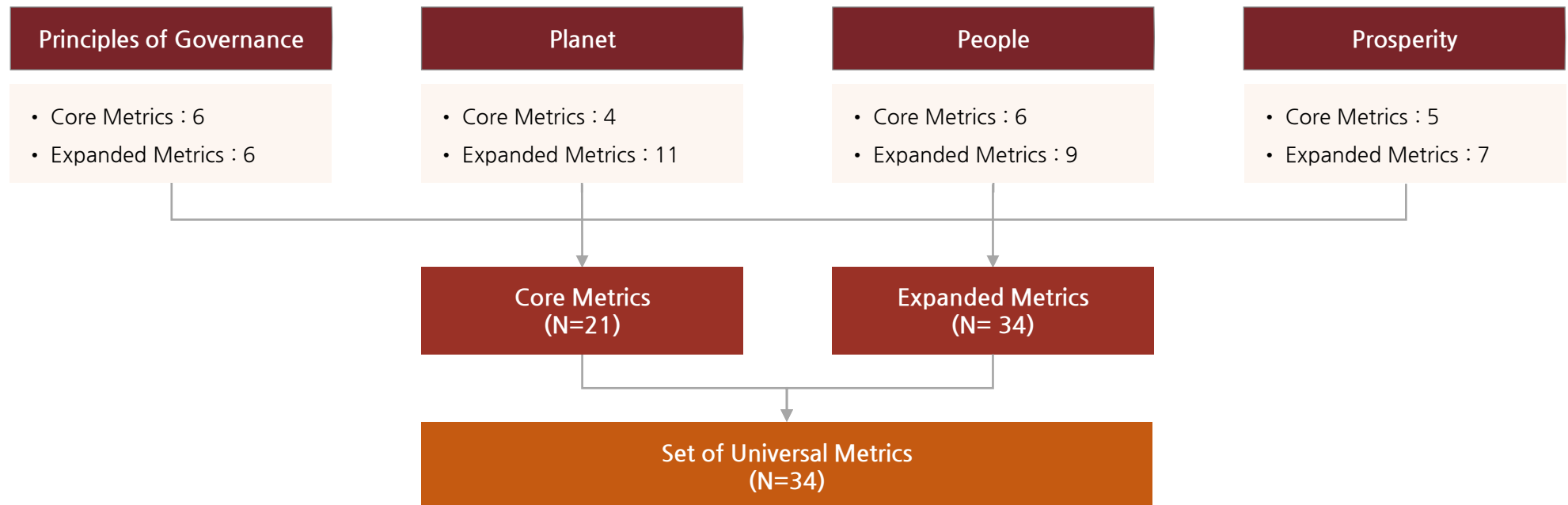
Ref.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World Economic Forum에서 기존 ESG Framework를 기반으로 55개의 Metrics로 이루어진 “Set of Universal Metrics and Disclosure” 발표, 글로벌 기업 121개사 공시 자료로 활용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 ❖ World Economic Forum 2020에서 UN SDGs 달성을 목표로 한 공통의 공시 Set of Universal Metrics and Disclosure 발표
- ❖ GRI, SASB와 같은 기존 ESG Framework를 기반으로 산업 혹은 지역에 제약 받지 않고 기업별 비교가 가능한 Data point 제시
- ❖ 121개의 기업에서 연간 보고서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보고 기준으로 사용, 그 중 48개 기업 2년 연속 보고 기준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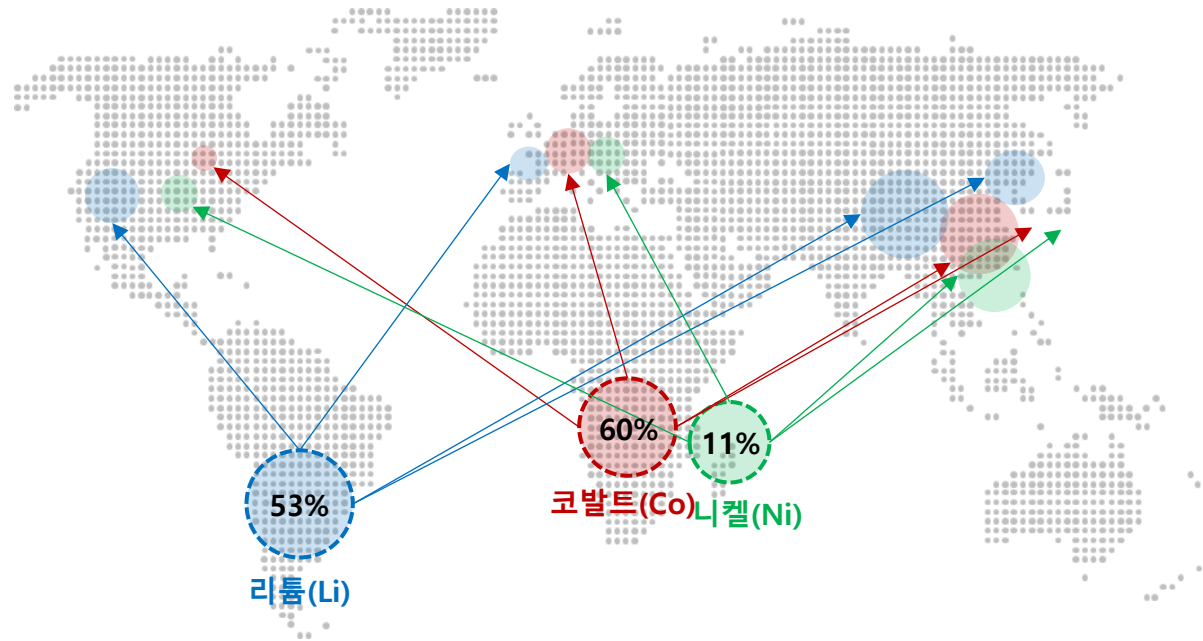
Ref.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The Four Pillars)

Pillar	Core Metrics	Expanded Metrics
People	• Diversity and Inclusion • Pay Equality • Wage Level • Risk for Incidents of Child, Forced or Compulsory Labor • Health & Safety • Training Provided	• Pay Gap • Discrimination & Harassment incidents & total amount of money losses • Freedom of Association & Collective Bargaining at Risk • Human Rights Review, Grievance Impact & Modern Slavery • Living Wage • Monetized Impacts of Work-related Incidents on Organization • Employee Well-being • Number of Unfilled Skilled Positions • Monetized Impacts of Training - Increased Earning Capacity as a Result of Training Intervention
Prosperity	• Absolute Number and Rate of Employment • Economic Contribution • Financial Investment Contribution • Total R&D Expenses • Total Tax Paid	• Infrastructure Investments and Service Supported • Significant Indirect Economic Impacts • Social Value Generated • Vitality Index • Total Social Investment • Additional Tax Remitted • Total Tax Paid by Country for Significant Locations

Agenda #8. 책임조달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며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발생: 예) EV시장 확대 → 코발트 수요 증가 → 분쟁광물 이슈제기 → CNN 등 집중보도 → 아동/강제 노동 이슈제기 → 가격급등

Material Trade Flow



국가별 전기차·친환경차 보급정책



무공해자동차(ZEV) 150만대 보급 목표
(By 2025)



신재생에너지자동차(NEV) 판매 19% 달성
(By 2020)



친환경차 판매 비중 50-70% 확대
(By 2030)



전기차 600만대 보급 목표
(By 2030)



전기차 판매 비중 100% 달성
(By 2030)

Key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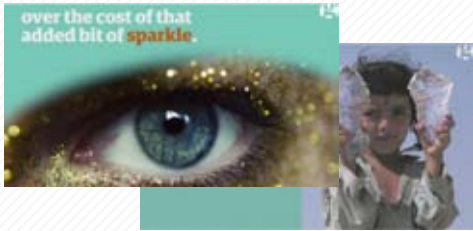
*Source: Cobalt Blues, Elsa Olivetti(MIT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Joule, 2017. 10.

- ✓ 전기차(EV) 상용화에 따른 리튬이온배터리 수요 증가 시, 코발트 수급이 Bottleneck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리튬 1당 코발트 1.7~2.8 사용)
→ 해당 광물의 안정적 수급은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주요 생산 및 공급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인권/노동, 환경 이슈는 선진국 및 주요 생산국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

Ref. Responsible MICA(운모) Initiative

화장품/건설/완성차 산업의 '광택용 소재'로 사용되는 '운모(MICA)' 채굴 시 아동노동 이슈 제기 → 전세계 생산량 80%를 차지하는 인도 운모 광산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산업 이니셔티브 운영 중

MICA 이슈



- ❖ 전 세계 MICA 생산량의 80%는 인도産으로, 이 중 90%는 아동노동, 70%는 불법광산에서 생산 중
 - 주요 이슈: 1일 8시간 채굴작업으로 5,000원 수령, 버려진 채석장에서 안전대책 없이 작업 진행
 - 소비 산업: 화장품(립스틱, 아이섀도, 블러셔, 파운데이션 등), 건설업(절연소재, 벽지재료, 단열재 등) 완성차(자동차 외장 페인트 및 코팅 소재 등)

❖ Responsible Mica Initiative 개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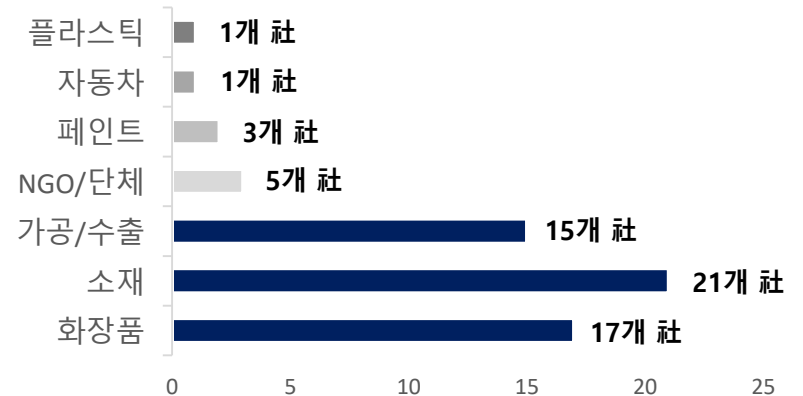
- '22년까지 인도 內 아동노동이 없는 운모 공급망 구축
 - 공급망 내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 중인 운모 광산 확인
 -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 확산

활동

- 운모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평가 및 광산 인증
 - 가공업체 대상 자가평가 실시, 필요 시 광산 현장실사
 - 윤리, 인권, 안전보건 차원 구체적 리스크를 산업 내 공유

확산

- 운모 공급망 전반으로 Good Workplace 업무표준 적용 권장
 - ISO, ILO, 미국 산업안전보건국 지침을 참고한 업무표준 배포
 - 운모 가공업체 대상 경영진 교육 및 개선과제 추진



Agenda #9. ESG 통상 이슈 (IPEF & USMCA)

IPEF 출범, 핵심 분야는 강제노동, 노동, 온실가스 감축, 공정경제 등 포함, '25년 7월 발효 예정인 新북미자유무역협정 역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조항 포함 → 생산자 책임원칙 적용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 2022년 5월 23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3개의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을 공식 선언, 5월 26일에 피지가 14번째로 합류하며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경제협력체 출범
- ❖ IPEF는 목표, 원칙, 전략을 포함하여 1) 무역, 2) 공급망, 3) 청정경제, 4)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4개 Pillars를 제시하고, 출범 이후 회원국간 12~18개월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
- ❖ 무역 Pillar에 강도 높은 노동 규범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해양수산부는 2023년 3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수산업 노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발표

❖ IPEF 4대 분야(Pillar)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Pillar 1 (무역)	(1) 노동, (2) 환경, (3) 디지털 경제, (4) 농업, (5) 투명성 및 규제 관행, (6) 공정경쟁, (7) 무역원활화 등
Pillar 2 (공급망)	(1) 위기대응 조치 및 조율 방안 마련, (2) 공급망 차질 대비를 위한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3) 핵심 원자재 접근권 보장 등
Pillar 3 (청정경제)	(1) 기술협력 강화, (2) 에너지 안보 및 전환, (3) 지속가능한 토지, 물, 해양 솔루션,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 등
Pillar 4 (공정경제)	(1) 반부패, (2) 이중 과세 및 조세 회피 방지, (3) 전문지식 공유, (4) 투명한 경제 시스템 발전을 위한 역량 구축 지원 등

Agenda #10. 플랫폼 노동자 (Online to Offline Platform)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적용 가능성이 낮은 '제3의 노무자'로 분류, 新 사회적 사각 지대로 부각되며 최저임금(Minimum) → 생활임금(Living) → 공정임금(Fair) 논의 확대 Driver 역할

플랫폼 노동자 지위 및 근로환경

특수고용직 노동자

-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 형태
- 피고용 여부가 애매하거나, 근로자 구분의 모호성 존재

플랫폼 노동자

- 일회성 과업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형태
-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불가



[대리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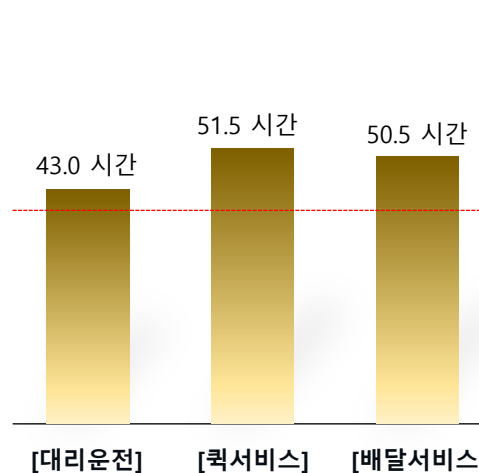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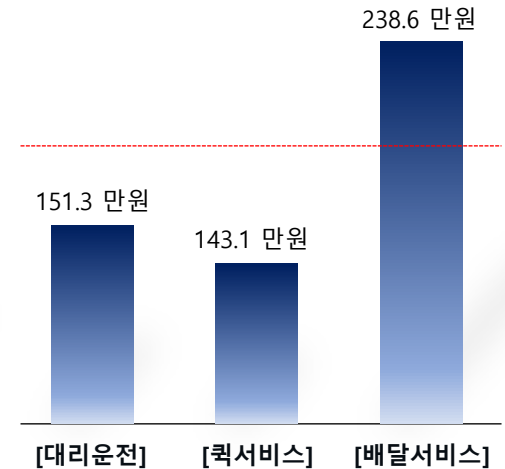
1주 평균 근로시간

법정 근무시간(40 시간) "초과"



1달 평균 급여수준

법정 최저임금(174.5 만원) "미만"



Sourc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자료 활용하여 재구성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추진단, 2020. 03)

- 1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회성/단발성 과업을 고객에게 제공 (과업 건 당 임금 지급) → 최저임금 충족 및 생활임금 지급 필요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고용 (별도 계약서 작성 X) → 노동3권 적용 및 4대 사회보험 보장 범위 포함 필요
- 3 대형 유통업체 외 중소기업체에서 초과근로/강제노동 이슈 발생가능성 高 → 협력사 평가 시 주요 점검 요인으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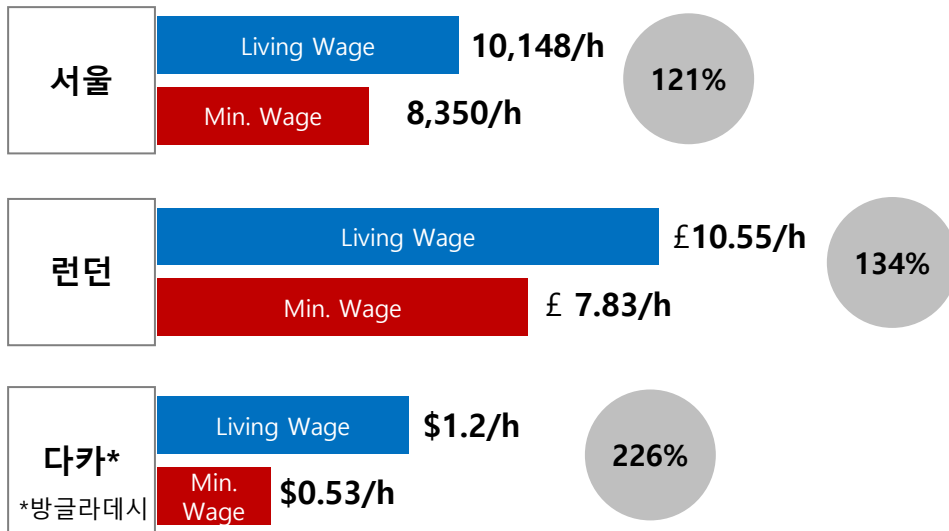
Ref. Min. Wage to Living Wage

포용적 성장 논의 연장선상에서 법적 최저임금에서 점차 실질 생활을 고려한 생활임금 보장으로 기준 축 이동
中 → Global Supply Chain 내 임금수준 검토 필요

“Minimum Wage → Living Wage”

-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거주, 식사, 교육, 보건 등)을 위해 생활임금 확보 필수적 (약 3,400만명의 근로자가 일 \$1.90의 소득으로 생활)
- 원재료 소싱 등 공급망 내 취약 부분에 대한 진단과 조치 필요
- 특히 식품, 유통, 관광업 등의 경우 생활임금의 보장이 지속가능성 획득을 위해 매우 중요 (RSPO, Tesco, Mondelez, Nestle)

주요 도시 Minimum Wage vs. Living Wage in 2019



Living Wage Initiative & Assessment 증가



Business for Inclusive Growth ('18.11)

- OECD는 생활임금 불평등 해소를 주요 아젠다로 하는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발족 (w/ BSR, Danone)



Platform Living Wage Financials ('18.09)

- **Robeco, ING** 등 11개 금융기관이 글로벌 공급망 생활임금 수준을 **평가, 투자 반영** (AUM €2,3 trillion)



Global Living Wage Coalition ('18.06)

- **Fairtrade, Rainforest Alliance** 등이 농장, 공장 등 공급망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발족(벤치마킹 맵 제공)

FOA, THQ, RTS, CON, COS 등 산업군을 대상으로 Future Question으로 등장 → **ESG 평가 내 생활임금 반영 증가 예상**

CASE. Human Rights (CHRB - Human Rights Bench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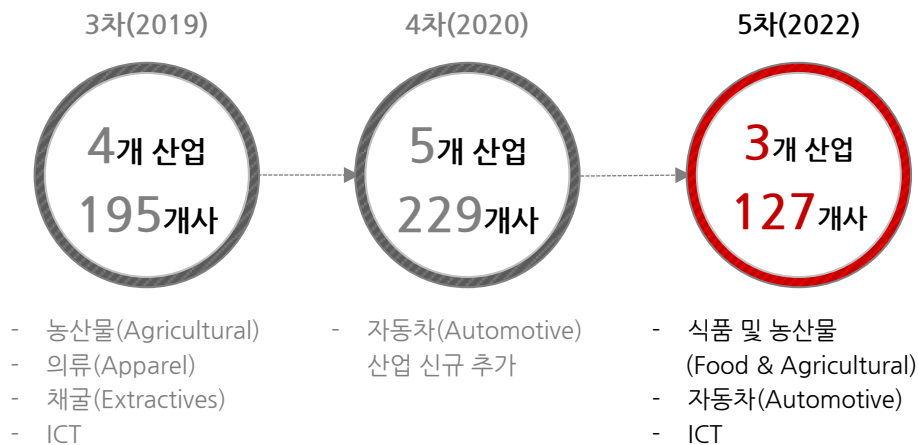
글로벌 인권경영 평가/벤치마킹 확대로 인하여 국내외 기업의 인권경영 이행 및 공시에 대한 요구 증대 → 인권경영 정책 수립, 세부절차 구축, 프로그램 운영, 구체절차 이행, 공시 必 (상대평가 증가)

CHRB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 ❖ 발간 목적: WBA가 인권과 관련된 주요 산업 분야 다국적 기업의 인권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 ❖ 평가 대상: 2022년 총 3개 산업 127개사, 국내 4개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 ❖ 평가 영향 증가: APG, Aviva, UNEP FI, CDP, CDSB, WBCSD 및 유럽 주요국가 외교부 지원

평가 대상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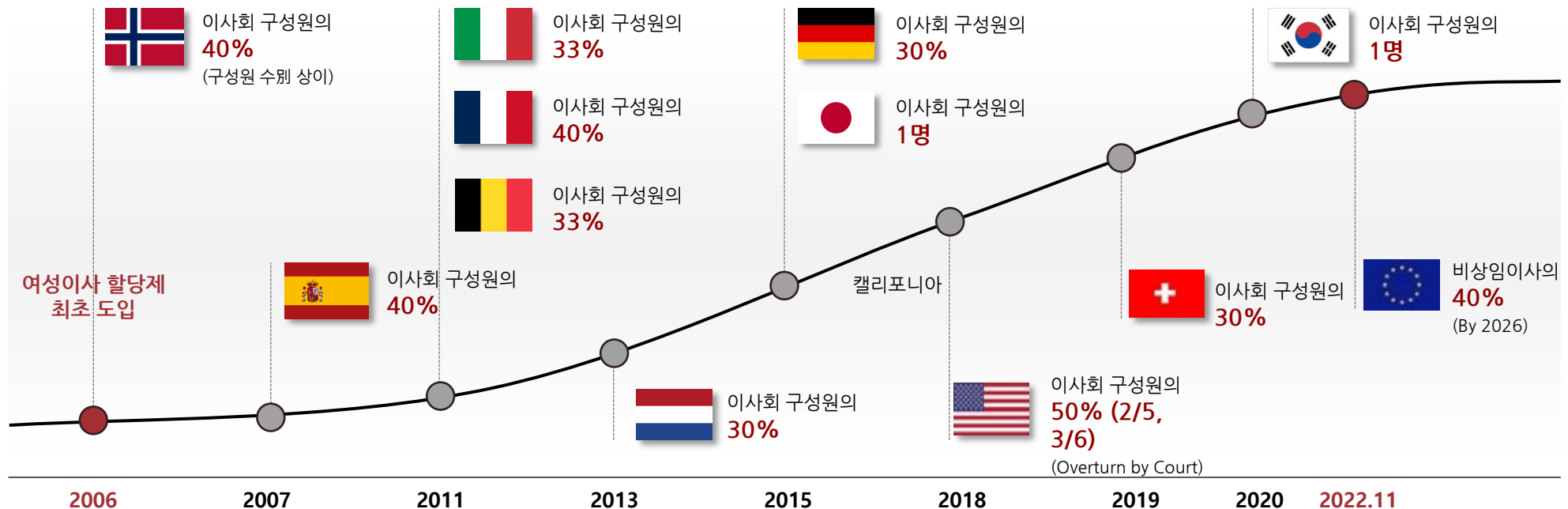


- 1 항목별 점수 공개로 평가 총점 외 세부항목 **비교 가능**
→ 동종 산업 내 ESG 관련 특정 주제·이슈에 대한 상대평가
- 2 비즈니스 모델, 전략, 리스크 등 신규 평가 방법론 적용
→ 실제 기업의 **인권경영 이행 성과(Performance)**에 초점
- 3 **공시 정보 기반의 평가 진행**
→ 인권경영 이행과 함께 **공시 필요성 증가**

Ref. Gender Balance & Pay Gap (Non-executive, Executive)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 규제 도입 확대 ('22년 11월, EU 의회에서 이사회 여성 비율 지침 통과)

국가별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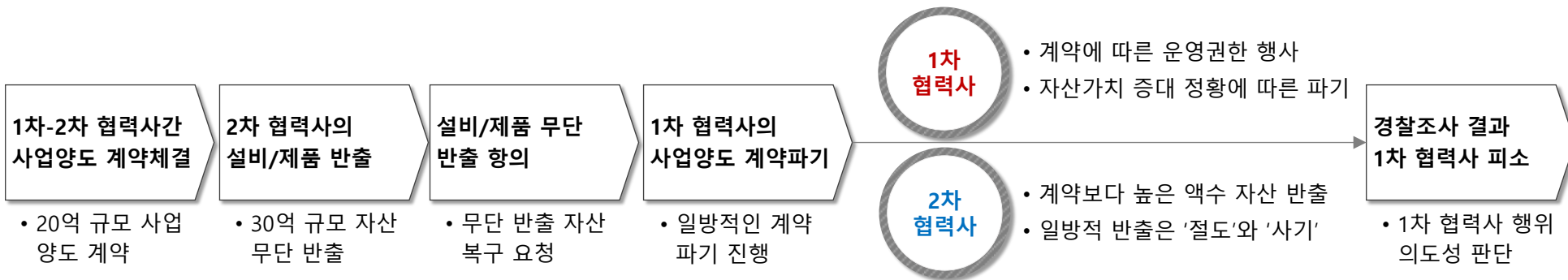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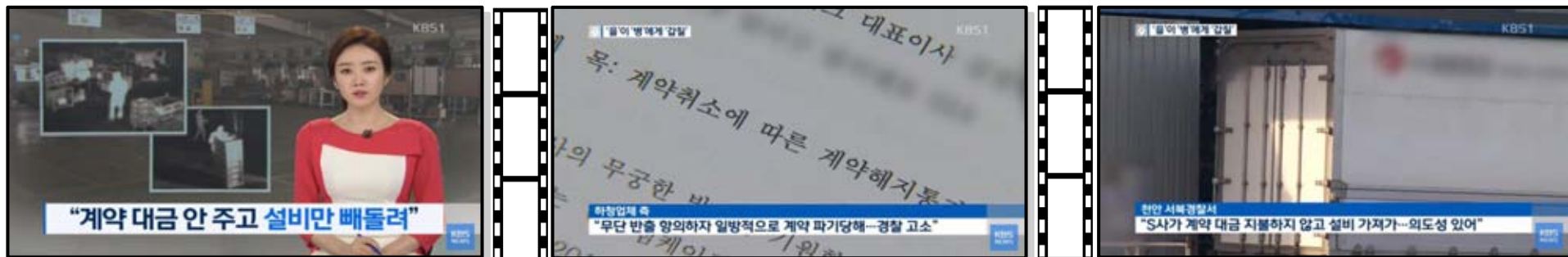
Source : EU "Women on Boards Directive",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기반 내용 재구성 (2022. 12)

❖ 유럽 내 상장: EU 국가 내 직원 수 250명 이상 상장기업, 비상임 이사의 40%, 전체 이사의 33% 이상을 Under-represented 性으로 구성('26년 6월 까지),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이사 비율 증가는 필수적 → 단기대응 여성 사외이사 확보, 장기대응 여성 사내이사 확보 必

Ref. 1차 vs. 2차 협력업체 ESG

지금까지 공급망 ESG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원청 vs. 1차 협력업체, 향후 공급망 ESG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1차 협력업체 vs. 2차 vs. 3차 협력업체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 대상 확대 필요

“을”의 “병”에 대한 갑질



Key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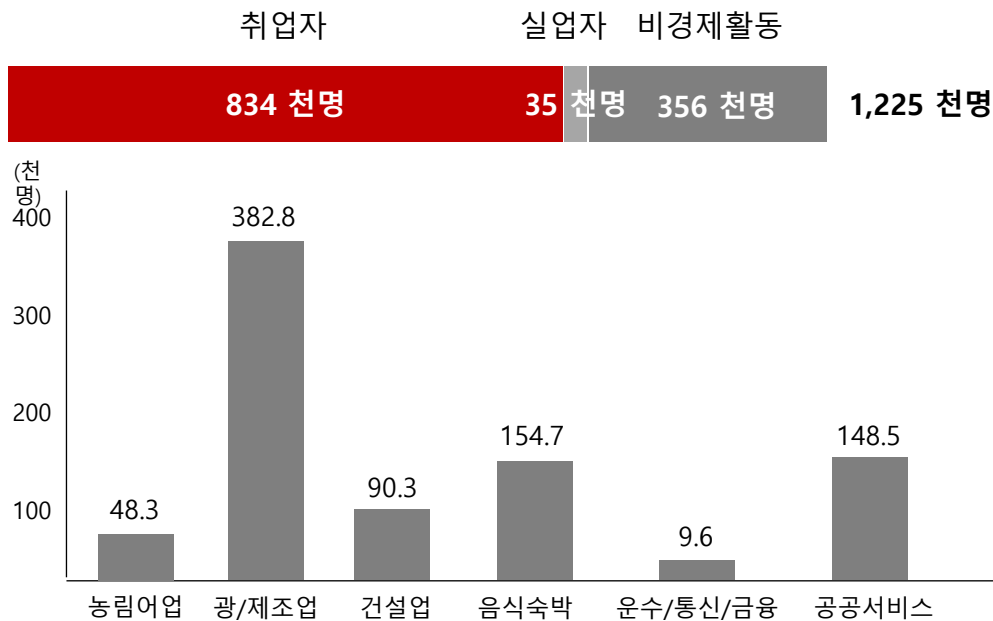
- ✓ 하위 협력사의 사업운영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납품지연 및 생산차질 발생 → 1차 협력사 대상으로 2차 협력사 지원 독려, 원청의 2차 이하 하위 협력사 직접 지원 확대

Ref. 이주노동자 by Industry

광업, 제조업, 음식숙박, 공공 부문에서 83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대기업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이슈는 대기업이 직면해야 할 이슈로 예측됨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자료: 통계청)



Ex. 카타르 건설노동 착취 조사결과

카타르 전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	94%	여권을 압류당한 이주노동자	90%
공공의료보험증 미발급 이주노동자	56%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21%
계약과 다른 임금을 받은 이주노동자	20%	계약과 다른 조건에 종사한 이주노동자	15%

“인권침해 속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원청업체는 **카타르 석유공사, 스페인 건설회사, 한국 건설회사(현대건설)**로 확인 ”

Key Issues

- ✓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일용직/임시직의 노동권 및 경제권이 착취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관의 관리감독 소홀
- ✓ 국제사회는 원도급업체의 협력사 이주노동자 관리실태 점검과 함께, 민간 및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

*Source: Potential First evidence of migrant exploitation on 2022 World Cup site, Amnesty

Ref. 상생협력 활동

ESG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단순 포상을 넘어 기술, 교육, 금융, 경영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더욱 향상하고,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음

지원 형태	지원 사항	타사 사례
# 일반적 지원		
우선 구매	- 공급업체 평가 가점 부여 - 물량 우선 부여	#한국타이어 ESG 평가 결과 Y등급 이상 협력사 우선선정 #SK이노베이션 ISO14000시리즈 보유 협력사 물량 우선 부여 * 안전보건환경 관리 관련 국제 표준 인증
# 추가 지원		
기술/품질 지원	- 기술이전 및 공동 기술 개발 - 시스템/설비 투자 및 개선 지원	#삼성전자 협력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기술 설명회'등 신기술 연구 성과 공유
경영 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산업 네트워크 지원 - 해외시장 진출 지원	#SK텔레콤 경영컨설팅, ERP 구축 지원, 리더십 코칭 등 지원 #KT 협력사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지원
금융 지원	- 납품 단가 조정 - 대금 지급 개선	#LG화학 1차 협력사 및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LG하우시스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금성 결제 진행
교육 지원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SK텔레콤 협력사 CEO 세미나 및 MBA 과정 지원

KIM & CHANG

Copyright © 2023 by Kim & Chang. This document is solely for the use of K&C representative.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K&C. If you need approval, please contact to dongsoo.kim@kimchang.com